

“DJ·노무현 이용해 기득권 지키려는 낡은 과거 끌어 내겠다”

김종인 '광주 선언' 뭘 담았나

25일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광주선언'을 통해 “호남의 밥과 꿈과 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의 '광주 선언'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제약할 못한 반성과 사과가 주요 내용이었지만, 최근 국민의당 사이와 불붙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 논쟁'과 햇볕정책 보완, 경제민주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대표는 광주선언을 통해 당 정책 등에서 국민의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이 었 보였다.

◇'적통 논쟁'에 가세=김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한 '광주선언'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를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과거 세력·관행은 단호하게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영광의 추억에만 기대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극복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내 새신사의 천명일 수 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적통을 자처한 국민의당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이 지면 적통 논쟁이 꼬리를 문 셈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2일 광주에서 가진 당 예비후보들과 간담회에서 “적추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결음과 행보가 뒤틀릴수 밖에 없어 꼭 필요한 논쟁이다”며 “기호 3번(국민의당 후보들)이 김대중·노무현의 적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앞서거나 뒤처거나 광주를 찾아 두 전직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DJ '적통' 논쟁 본격 가세

대북·안보 정책 변화 시사

'車100만대' 총선 공약 채택

정당들 가운데 어느 쪽이 선명성을 보일지는 지역 표심 향배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안보정책 변화 시사=김 대표는 더민주의 대북·안보 정책을 상징하는 '햇볕정책' 보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북한 궤멸론”을 꺼내는데 이어 이날 광주선언에서도 “햇볕정책은 유효한 대북정책이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 대북정책은 진일보해야한다”고 햇볕정책 보완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햇볕정책을 수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라 햇볕정책을 지금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광주선언 이후 광산구 진곡산단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햇볕정책은 평화통일의 하나의 수단이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현재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햇볕정책을 어떻게 수정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햇볕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소위 북한과 평화 통일을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북한을 자주 더 끌어내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햇볕정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대북정책은 진일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 간 대화자체가 중단 돼

버렸고, 대화가 영원히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지금 조금 진일보해서 앞으로 가자는 얘기가”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정관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해 대북 강경론이 비등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대 강연에서 ‘포용으로 상생을 끌어내야 한다’고 햇볕정책을 되살렸다”면서 “호남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정책이슈는 대북문제”라고 가치를 강조했다.

◇유능한 경제정당·정치민주화 강조=김 대표는 이날 광주선언에서 더민주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집단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악 구분의 낡은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당, 정책 중심 정당인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수권정당 더민주는 광주 시민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정권교체’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또 광주선언 이후 이날 오후 진곡산단단지 내에 위치한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체와 유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광주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대모비스 광주모토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더불어 성장론’에 대해 설명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현 테러법 처리와 관련한 정국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비판은 예외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갈이 절박한데...국민의당 혁신공천 딜레마

더민주와 쇠신경쟁...수도권 2명 등 최소 4명 거론

교섭단체 구성 시급...“선부른 컷오프 분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공천배제) 태풍이 국민의당에도 몰아닥칠 전망이다. 야권 주도권을 놓고 더민주와 치열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 혁신 공천 공세에 나선 더민주에 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호남에서 최소 2명 내외, 수도권에서 2명 정도의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밝힌 것처럼 탈당자 가운데 컷오프 대상자의 명단이 발표될 경우 물갈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천정배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혁신적인 신진 인물이 대거 국회에 진출해 정치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정권교체·야당교체·인물교체가 지금의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전윤철 공직후보자직접심사위원회 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공천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공천 시행세칙 마련 등 향후 공천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도 이날부터 당사에서 상근하겠다고 선언, 선거대책위원회의 체제 정비와 조속한 가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당이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체비를 갖추면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물갈이 쓰나미’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예민한 반응

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합류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물지마 컷오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전략공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경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선부른 컷오프는 오히려 당내 분란 폭발시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민주에서 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영입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컷오프 대상자를 영입한다면 ‘새정치 후퇴’ 역풍과 함께 정체성 논란 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입을 한다고 해도 지지층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물들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한 국민의당으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할 만한 인사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 떠난 사람에게 ‘능력 부족’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김종인 “컷오프 탈당자 명단 곧 공개” 논란...국민의당 현역의원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5일 ‘하위 20%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현역의원 중 탈당 후 국민의당에 합류한 의원들의 명단까지 공개한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 공개되지는 않았고 국민의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발표된 20% 컷오프 결과로는 호남 주축 혁신이 부족할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미 탈당한 사람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명단도 바로 발표하도록 공직선거관리위원회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공개될 것”이라며 “‘당내 컷오프 대상자 중 발표되지

않은 나머지 명단이 오늘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 관계자는 “김 대표의 발언은 공관위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혜훼손 및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일 수 있어 당장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위 20%인 25명의 컷오프 대상자 중 탈당파는 12명이다. 따라서 광주 의원 상당수가 이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문제는 명단이 공개된다면 해당 의원에게는 당내 경선·공천, 그리고 선거운동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게 하는 불명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동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당을 떠난 사람에게 ‘능력 부족’을 이야기해서 되겠느냐”며 “더민주가 왜 광주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김정현 대변인도 “24일 밝혀진 컷오프 명단도 자신들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확인한 것인데 오늘 남의 당 소속 국회의원을 명단을 공개한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지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